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아일랜드 부실 부동산대출 위기, 유럽으로 확산 조짐

-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및 주택 모기지 대출의 부실로 재점화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위기는 과다채무국의 국채수익률을 최고수준으로 상승시키면서 그 여파가 전체 유럽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조짐임.
 - 아일랜드의 국가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은 상업용·주택용 부동산 부실대출로 은행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11월 11일 현재 다시 최고치를 경신함.
 - 또한 아일랜드의 CDS프리미엄 상승은 재정위기로 국가신용위험도가 저하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CDS 프리미엄을 최고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있음.
 - 이에 그리스, 이탈리아, 포르투갈의 국채가격은 채무지급불능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며 아일랜드, 스페인, 포르투갈 등은 조만간 유로금융안전메커니즘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.
- 유럽중앙은행은 과다채무국의 국채를 최소한도로 매입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기존의 긴축재정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.
 -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정도의 소규모 국채매입은 가능하겠지만 과다채무국에 대한 공적인 재정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함.
- 한편, 과다채무국에 대한 구제금융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독일이 민간 투자자들의 비용부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민간 투자자가 국제금융 비용을 부담할 경우 금융시장을 위축시켜 과다채무국의 부채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유럽 전체 국민에게 조세를 거둬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제기함.
 - 경제적 측면에서는 민간 투자자의 부담이 면제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추후 금융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는 주장과 민간부문의 비용 부담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국가신용도가 낮은 국가의 단기 대출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대치됨.
 - 정치적 측면에서는 구제금융비용이 과다채무를 발생시키면서 이익을 창출한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됨.

(Financial Times 11/11, Wall Street Journal 11/9)